

여수엑스포 민자사업 위기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위락시설 개발권 보장’ 기업 유인해야

기업들 “시장 규모 적어 수익 불확실” 투자 꺼려

내년까지 민자유치 안될 땐 정부 재정 투입 필요

2012년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민자유치 난항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국내외 기업들이 여수엑스포 민자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최종 윤곽이 드러나는 여수엑스포 기본계획 등에서 민자 유치를 촉진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자 유치 현황=여수엑스포 조직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자 유치와 관련, 투자 가능 업체를 모색하고 있으나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개월동안 각 민자시설별별 관심을 보이는 국내외 업체들과 물밑 접촉에 나선 것은 물론 공식적인 투자 설명회도 개최했으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정부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기업들이 뛰어들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보다 획기적인 민자 유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익성 문제=국내의 기업들이 여수엑스포 주요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시장 규모가 작아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여수와 광주·전남지역의 경제규모 및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쿠아리움의 경우, 부산에 이미 운영중인데다 인근에 대형 위락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엑스포 이후 관람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여수와 전남 자체적인 관광객 유치 요인이 약한데다 엑스포

이후 대형 이벤트도 없어 숙박객 확보가 어렵다는 평이다.

여기에 타 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월등한 수도권 지역의 수요를 유치하기에는 여수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책 마련 절실=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직위에서는 민자 유치를 위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여수박람회 기본 계획에서 세부시설 계획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자 유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

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주변지역 개발권 보장 등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위락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권을 보장, 기업들을 유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곤 의원은 “민자 유치의 핵심은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조직위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 여수엑스포 투자자 지방세 감면 추진

2012년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 투자자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3일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람회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도 세계박람회기구(BIE) 관계자와 박람회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방세가 감면되면 박람회장 예정부지 173만㎡의 매입비 1천609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은 7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조선산업 지원 심도있게 검토 중”

박재완 靑 국정기획수석 광주 강연회

“광주·전남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3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선진화 시민행동 초청 강연회와 지역민 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J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특히 이날 전남지역 서남권의 새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에서도 전남지역의 조선산업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여론 등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 개혁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난 60년 우리 나라는 눈부신 성취를 이뤘지만 남북 분단, 시장 기능의 약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또 공기업 민영화 및 통합의 의지를 강조한 뒤 “기초질서와 법치가 느슨해져 있는 것, 책임 의식이



취약한 민주화 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촛불시위와 관련 “좋은 방향으로 여론이 응집된다면 경제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수석은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개혁정책 가운데 뉴질랜드와 같은 작지만 꾸준한 개혁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최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좌요에 대해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닌데, 자화자찬으로 비춰진 것 같다”면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도로 한 말이었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강연에 이어 지역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상경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첨단의료단지 광주·전남 공동유치위 출범.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주·전남 공동유치위원회가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한 가운데 유치위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유치위원회는 광주·전남 지역 구 국회의원 20명과 김윤수 전남대 총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 각계 인사 66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최운초 의장 등 돈 사용처 수사력 집중

북구의회 돈선거 수사 방향·전망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 여부 파악도

검찰이 3일 최운초 광주 북구의회 의장을 구속한 데 이어, 구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장 선거과정의 금품살포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K의원의 부인 J씨의 금품 수수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과 의장의 연관성 등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 및 전망=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상윤)는 그동안 제3차 뇌물교부 혐의로 3일 구속한 최운초(63) 의장과 최 의장과 함께 의장선거 임후보자로 나선 K의원, 또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국회의원 부인 J씨에 대한 계좌추적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애초 의장 임후보자였던 K의원의 의장 선거 과정에서 J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K의원 보다 최 의장이 J씨에게 더 많은 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최 의장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이외의 금품이 더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구의회 의원들의 계좌 내역을 넘겨받아 확인 작업과 함께 의회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의회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와 함께 최 의장과 K의원이 J씨에게 건넨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의장 선거에 나선 뒤 최 의장에게 패한 K의원으로부터 “J씨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가 일부만 돌려받았고, 일부는 4·9 총선 전에 건네졌다”라는 진

술을 확보하고 이 돈이 K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J씨를 조만간 소환해 남편인 K 국회의원이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북구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반응=지역 정치권은 검찰이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 북구의회 의장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 게 왔다”며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상 정치인이 또 있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는 등 온갖 설까지 걸치면서 검찰 수사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변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애초 북구의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부터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전반기에 북구 갑 지역 의원이 의장을 했던 만큼 이번에는 북구 을 지역에서 의장을 선출키로 의원들간 얘기가 됐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1·2·3순위까지 거론됐는데, 돈 액수에 따라 의장이 결정됐다는 ‘그럴듯한’ 설(說)이 파다했다.

이같은 설이 검찰 수사 내용과 비슷하게 들어맞은 데다 지방의원간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부인에게 거액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텃밭인 광주지역에서 이같은 일이 터지자 불리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엄격한 도덕성을 무기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도 무색하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K 국회의원은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 “수사가 진행중이니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Volvo advertisement for the Grand Open event. The ad features a large Volvo car in the foreground and a background image of a city at night. Text includes 'GRAND OPEN', '세계 최고의 안전을 누리자', '빛고을 문화를 누리자', and 'Volvo. for life'.